

요약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활용도 높이려면 서울시 단위 복지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 이용해 정책적 관심집단 심층분석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제2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동시에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01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어 기초분석보고서가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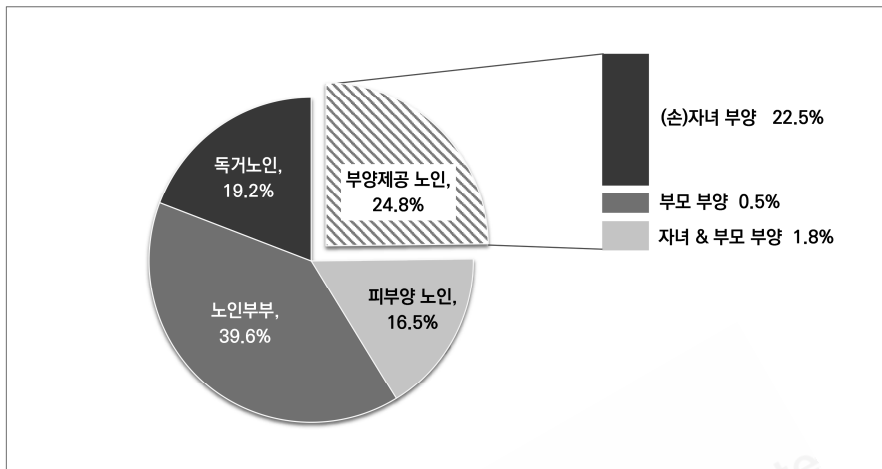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특성, 가구원특성, 주거특성과 같은 기초사항에서부터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등 개별 복지정책 영역별 실태와 욕구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정책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별, 하위집단별 서울시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하위집단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 노인 중 58.8%는 독립적 생활, 24.8%는 다른 가족원 부양

65세 이상 서울노인 중 피부양자로서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는 노인은 16.5%로 조사되었다. 반면 58.8%는 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 형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24.8%는 가구주로서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많은 노인들이 가구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오히려 부양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다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34.3%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 모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구유형이다.



[그림 1] 서울노인의 가구형태와 부양체계

베이비부머, 현 노인보다 경제적 안정...부모부양·자녀양육 '이중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세대 노인에 비해 학력이 높고 소득과 자산 모두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양호하다. 노후준비 정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노후여가생활을 선호한다.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74.5%로 현재 노인층의 44.7%보다 높아 노후생활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기부나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전히 7.8%의 베이비부머는 어떤 형태의 노후 경제생활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노년기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는 여전히 자녀를 부양하는 낡은 세대가기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69.4%가 2세대 가구로 여전히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고 있다.

중산층은 보편적 복지 선호·무상복지 비선호 ‘복지의식이 보수적’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가구 중 중위소득의 50~150% 미만에 속하는 중산층은 73.7%이다. 이들은 연령, 학력, 경제활동상태, 가구 경제 수준 등 모든 면에서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과 상류층(중위소득 150% 이상)의 중간적 특성을 보인다.

중산층은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지만, 무상복지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중산층에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고, 고세금/고복지보다는 저세금/저복지 선호도가 다소 높아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5%~125%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중산층은 가구소득이 평균 4,090만 원이고, 가구주는 주로 남성, 평균 연령은 46세이다. 가구주의 절반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상용직 임금근로자이다. 중위소득의 50%~75% 미만의 하위중산층은 빈곤층보다는 양호한 상태이지만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한계중산층임이 확인되었다.

[표 1] 중산층의 복지의식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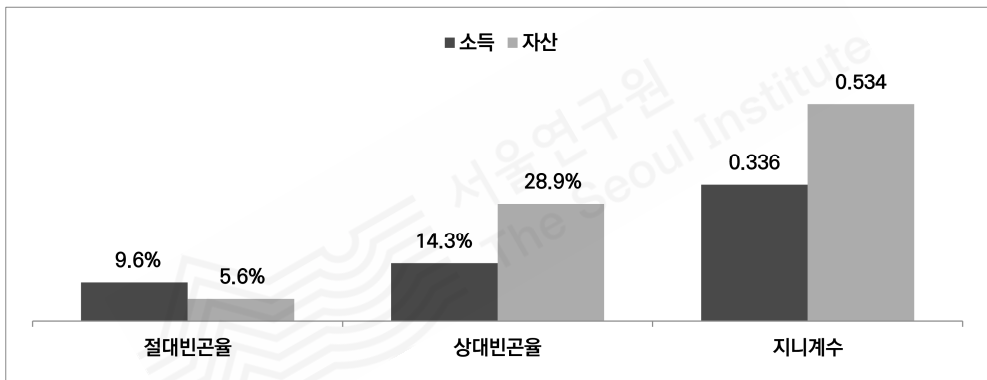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	$\chi^2(p)$
복지대상	빈곤층	27.0	33.6	24.7	16.857 (.002)**
	중립	33.2	27.4	31.4	
	모든 국민	39.8	39.1	43.9	
비용부담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	47.1	40.8	39.3	8.512 (.075)
	중립	26.6	35.1	35.2	
	무상제공	26.3	24.1	25.5	
복지수준	저세금/저복지	33.0	26.8	17.4	30.413 (.000)***
	중립	49.5	49.7	52.1	
	고세금/고복지	17.6	23.4	30.5	

* $p < 0.05$, ** $p < 0.01$, *** $p < 0.001$

서울 빈곤율·불평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

서울시 가구 중 약 9.6%가 절대소득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를 가구원 수로 환산하면 인구 빈곤율은 8%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96이고, 소득 지니계수는 0.336으로 산출되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빈곤통계연보와 비교해 서울은 대부분의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한편, 순자산액이 최저생계비 6개월 치 미만인 절대자산빈곤율은 5.6%로 소득빈곤율보다 낮다. 그러나 중위 순자산액의 50% 미만인 상대자산빈곤가구는 28.9%이고,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34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그림 2] 빈곤율과 불평등도

빈곤가구 유형 중 비수급 빈곤가구·근로빈곤가구가 복지사각지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법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가구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단독가구, 고령가구주가 많다는 점에서 수급가구와 유사하지만, 수급가구보다 근로소득과 자가 소유율이 높다. 근로소득과 자가 소유가 비수급 빈곤가구가 기초보장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표본가구 중 6.3%는 가구원이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총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근로빈곤가구로 확인되었다. 근로빈곤 가구는 가구원이 경제활동을 하지만 주로 임시직/일용직에 종사하고, 상용직인 경우에도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총소득은 높지 않다. 더구나 아직 자녀교육비도 지출해야 하는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수급 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는 기초생활영역에서 물질적 결핍을 경험한 경우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조사한 6가지 기초생활 항목에서 비수급 빈곤가구는 공과금 연체와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많았고, 근로빈곤 가구는 공과금 연체와 난방중단 경험이 높았다. 비수급 빈곤가구는 고령자 가구가 많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취약함을 보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표 2] 가구유형별 결핍경험률

(단위: %)

구분	난방 중단	집세 연체	공과금 연체	공교육비 미납	결식 감식	의료서비스 미이용
전 가구	9.2	5.8	9.7	1.0	1.7	2.4
비빈곤가구	8.0	5.1	9.0	0.8	1.5	1.5
빈곤가구						
수급가구	30.4	31.9	38.8	0.0	26.8	13.1
비수급 빈곤가구	19.0	12.8	22.9	1.7	2.9	22.1
차상위가구	19.6	10.0	10.7	5.6	0.0	7.2
근로빈곤가구	20.0	14.6	25.0	4.8	5.6	16.0
비근로 빈곤가구	20.6	13.6	10.7	3.4	2.2	3.9

주1. 비해당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가구 빚 평균 2,107만 원...저소득가구, 부채액 비해 이자부담 더 커

서울시 가구 중 63.9%가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17.8%가 5천만 원 미만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전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2,107만 원이고, 부채가 없는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871만 원이다.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40~50대 남성이 구주 가구에서 부채도 더 많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가계 경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가계가 어려운 가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전월세보증금 등 주택 관련 용도가 가장 많다. 소득수준이 높고 자가 거주 가구일수록 주택구입 용도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자가 거주가구가 하우스푸어(house poor)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가구주가 60대 이상, 여성가구주인 가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고 월세거주 가구는 생활비 또는 의료비 용도로 빚을 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가구들은 부채 총액은 적지만 이자 지불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부채액이 많아 매달 지출하는 이자 금액은 많지만, 소득대비 이자액 비율로 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이자지출 부담이 더 크다. 이자지출액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전체 평균 9.1%인 데 반해 소득 하위 1분위 가구 중에서는 21.6%로 매우 높다.

[표 3]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단위: 만 원, %)

		월평균 이자액	소득대비 이자지출 비중(%)					평균
			2.5% 미만	2.5~5%	5~7.5%	7.5~10%	10% 이상	
부채가구 전체		17.54	40.0	27.4	16.6	7.0	9.1	4.6
소득 계층	소득 1분위	7.92	41.1	20.0	10.6	6.8	21.6	6.7
	소득 2분위	9.95	51.0	19.0	17.8	4.5	7.7	3.9
	소득 3분위	17.86	32.9	26.9	21.5	8.9	9.8	5.2
	소득 4분위	18.85	38.3	28.5	17.8	8.4	7.0	4.3
	소득 5분위	26.71	37.2	38.1	12.4	6.1	6.3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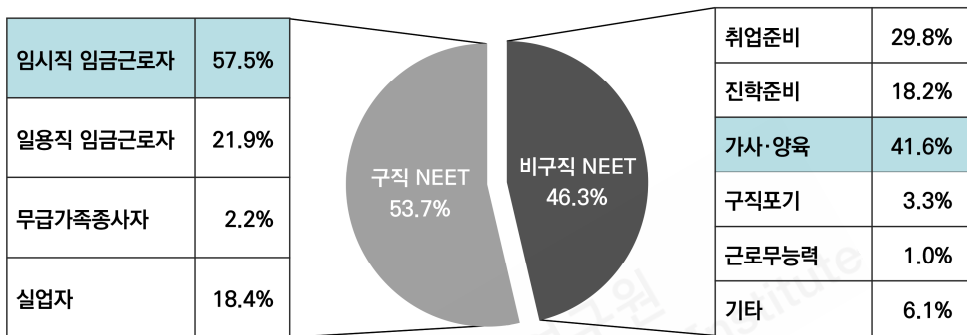
주1. 결측값을 제외한 유효퍼센트 기준임.

15~29세 청년 가구원 중 11.8%가 ‘청년 NEET족’... 대부분이 여성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 15~29세 청년 가구원 중 11.8%가 청년 NEET로 확인되었다. 구직 NEET 중 현재 전혀 일하지 않는 실업자는 18.4%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 형태가 임시직 57.5%, 일용직 21.9%로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임금의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비구직 NEET는 취업 또는 진학준비를 하는 등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비율이 높지만, 41.6%가 가사나 양육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결혼한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NEET 내에서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서 현재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가정경제 상태가 양호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은 당장 열악한 직종에 취업하기보다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통해 더 나은 일거리를 찾는 사례가 많은 반면 저소득, 저학력 청년 NEET는 열악한 고용조건에도 불구하고 임시·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들의 여건상 당장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청년 NEET의 활동상태

취업난, 결혼·육아 부담, 가치관 변화로 켑거루족, 골드미스족 등장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하나로 켑거루족이나 골드미스족이 나타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켑거루족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독거 미혼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켑거루족과 골드미스족은 결혼을 미루고 독신생활을 즐기는 것도 두 집단의 또 다른 공통점이다. 이들 중 자발적인 만혼도 있겠지만,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결혼과 양육의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 복지 관련 데이터체계 점검해 ‘활용도 높은 체계’ 구축해야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정책 대상 집단의 가구주와 가구 특성, 그리고 가구 경제상태 등 기본적인 가구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심층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복지 관련 조사통계 데이터는 매우 빈약하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서울복지실태조사와 4년마다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가 있고 노인, 아동 등 인구집단별 조사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다. 더구나 개별 조사 간의 위계도 설정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조사내용은 중복되는 점도 있다.

복지 관련 조사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고 다른 조사데이터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서울시를 단위로 하는 복지데이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